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과 황우석 교수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 자료를 조작하는 것을 든다. 이보다 심한 위반은 자료를 왜곡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포퓰리즘은 세 번째 유형의 반지성적 윤리위반이다. 그것이 검찰이 되었건, 언론이 되었건, 감사기관이 되었건,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비비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면 구체적 객관성이나 합리적 절차는 물론 무시되고 의도된 결론만이 부각되는 경우

미국의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에서 쉽게 탈락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거의 모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다. 요즘은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오는 젊은 교수들이 많고, 연구 스트레스로 얻은 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뜨는 젊은 교수들의 장례식을 종종 찾게 된다.

십여 년 전에 우리 대학들이 100대 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두세 개 대학은 이미 100위 안에 들었고, 서너 개의 대학도 100위권에 들어가 있다.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에 1%도 기여하지 못하고, 대기업재정을 제외하고는 법정기부금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학 재단이 대부분인 형편에서 외국대학과 경쟁하여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교수들의 몫이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시간강사 자리를 전전하다가 평균 40세 전후해서 교수로 임용되는 교수들에게 65세 정년이 요즘 다른 직업에 비해 너무 길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못하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십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대접이 이 정도면 지식사회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성숙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부분이 포퓰리즘은 버리고 이성적 토론의 장을 가꾸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릇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한 변명은 구차해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비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면 일일이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조용히 침잠하여 일일삼성(一日三省)하는 자세로 살아왔다. 하지만 제자들 앞에서 스승의 과오가 억울하게 부풀려지면 치욕스러운 것을 참지 못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성상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확대되면서 언론에서도 대학과 대학교수들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 인상이 대학교수들의 연봉 인상에만 쓰이고 있다는 보도는 교수들을 강단에 서기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장차 학문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 앞으로 대학교수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면 대뜸 학문을 포기하라고 호통치는 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문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먼저 생각하

면 시작하지 아니할만 못하다는 것이 평소 제자들에게 건네주는 충고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의 기쁨이 어떤 미래의 어려움보다 앞설 때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이 학문의 세계인 것이다.

대학교수를 위한 변명

높은 학문적 자존심 때문에 교수들은 작은 잘못에도 과로위하며 종종 자살의 길을 택한다. 이런 교수들에게 최근 언론의 공격은 지나친 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등록금과 교수 봉급이 동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통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하여 대학교수 봉급이 수십% 인상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론의 지성을 의심하게 한다. 교수 연봉 자체도 엄청나게 부풀려진 통계를 사용하여 교수들을 당황하게 한다.

외국에서 연구윤리 위반기준은 크게 다

가 흔하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변한 조직이 있다면 아마 대학사회일 것이다. 영어강의가 40% 가까운 대학이 많이 있고, 해외학술지 논문은 이십 년 사이에 스무 배가 늘었다. 대학에 몰아친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로 많은 대학의 교수 연구업적은 미국의 유수 대학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

정년심사에서 탈락되는 비율이 낮다고 비난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탈락은 사망선고와 같기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승진 기준을 맞춘다. 미국 유학에서 보더라도

다. 어떤 이들은 일제잔재 청산을 말하면 해묵은 반일감정이나 진부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야기하는 인권 말살, 자본의 착취와 계급의 문제,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여성 인권,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근로정신대'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제, 할머니들의 연세는 모두 80이 넘었고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오래 끌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마땅히 정부가 할 일이나 못하는 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한한 해결을 해보자. 백번 생각해도 이 문제는 과거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근로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NGO 칼럼



장연주

“가슴에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행은 뻔한 심정이다.”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피해자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문제해결에 애써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신 말씀이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을 중학교에 보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꼬드쳐 끌고 가서 살인적인 노동을 시키고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본인들에게

아무런 보상책임이 없었다 이들이 우리 시민들의 1인 시위와 10만 서명운동, 일본원정 투쟁 등에 손을 들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앉은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협상투쟁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10만 희망 릴레이가 지난 2월부터 씬없이 이어져 이제 그 목표의 절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만 희망 릴레이’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간 징용자의 수인 10만명이 1000원씩의 협상기금을 모금하자는 운동이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칫 막 빠질 수 있는 기간이 협상과정에 활기가 되어주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도 외면하고 국민들도 그 존재를 모르던 사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수 없이 일본을 오가며 의

로운 싸움을 해오셨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나고야 지원회의 후원을 받으며 진행된 재판 투쟁도 2008년 끝내 패소하였다. 이제는 접어야하나 싶을 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협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는 6월 29일은 지난해에 일본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고 할머니들에게 내놓은 99엔(1300원)에 대한 재심사청구공개심리가 열리는 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 탈퇴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당시 가치로는 소 두 마리 정도 살 돈이었다고 하나 66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을 액면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아니가. 99엔이라는 일본의 양심이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20명의 방문단이 일본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

근로정신대 문제는 우리 미래를 위한 일

기고



하영철

우리는 ‘자율’, ‘창의’, ‘자기 주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자녀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 자율성 기르기, 창의성 기르기, 자기 주도적 학습력 기르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며 보편적 규칙에 의해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창의성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비리 척결이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교육비리 척결, 일방 지시만으론 한계

위한 광주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학교장 청렴 서약’, ‘금품(촌지) 등 수수행위 거부 선언’, ‘학교 촌지,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등으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교육청이 비리 척결을 위해 취하는 요소들의 해결 방안은 진보가 아닌 보수, 리더가 아닌 매니저로서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가공무원법에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발령을 받았을 때 기관장에게 ‘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규정이 있으며, 대부분의 교원은 전전한 교직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청렴 서약이나 청렴 선언 보다는 교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제3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교육청의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닐로그적, 전근대적인 사고의 함정에서 나온 발상으로, 형식주의, 문서주의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학교는 개방체계, 이원 결합체, 쓰레기통 모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이다. 이 같은 조직에서 조직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 명령보다는 그들의 자율적 참여를

도 이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시키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농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훨씬 커질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절실한 ‘반값 등록금’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미친 대학등록금’이 지역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다.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50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200만 원 정도 적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지방의 경제규모와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역대학의 최근 5년 간(2004~2009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 26%, 사립 22%로 물가 인상을 15.2%를 앞질렀다. 지역 학부모들은 지방경기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엄청난 대안적으로 교육비 부담마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 학생이 서울의 대학보다 등록금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다. 지방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계

가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에 비해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경제규모에 견줘 지방 고등교육 예산은 턱없이 인색하다. 따라서 정부는 획기적인 예산지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그 다음의 문제다.

특히 정부는 인하율이 아닌 인하 액수를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보다 등록금이 낮은 지방이 차별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이지 않은가.

지역대학도 먼저 나서서 등록금을 줄이고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 수 백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획기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현직 구청장이 무허가 건물에 임대라니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데다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에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자치구 단체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도 모자라 임대수익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김 청장 소유의 북구 중흥동 대지 200.60㎡에 들어선 건축물은 북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물로, 현재 A회사에 임대해 준 상태라고 한다. 또 다른 중흥동 대지 380.15㎡의 건축물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뒤 B사에게 임대해 줬다.

현직 구청장이 건축법을 뺀히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지 않았으니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을 신축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인들도 상식이다.

게다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불법 증축에, 임대료까지 버젓이 챙기고 있는 데도 관할 구청이 왜 방치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청장의 영향력 때문에 눈 감아왔다면 더더욱 큰 문제다.

김 청장은 또 올 초 재산공개에서 본인 및 가족의 재산 27억7571만1000원을 신고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임대수입을 누락시켜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랫동안 공무원을 한 공직자로서, 두번씩이나 선거에 당선된 구청장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김 청장은 자신의 과오와 물의에 대해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법적 조처에 따르고 지역민에 대한 공개 사과도 주저할 일 아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 사퇴도 심각히 고려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인들도 상식이다.

無等鼓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는 점차 사람을 강도 높게 ‘감시’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IT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된 장비들이 사람의 언행을 옥죄는 바람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의 행동을 엿보거나 통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비가 바로 CC(closed circuit)-TV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금은방에 도둑이 드는지 감시하는 등 방범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보모가 맡은 아이를 혹시나 때리지 않고 얼얼하게 지켜보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다용도인 CC-TV의 사용처가 한 곳 더 늘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집무실 풍경 이야기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초 집무실 전장에 녹음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했다. 청탁을 위해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을 아예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유명 배우였던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독직 파동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당했던 곳이다.

전직 시장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 되자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부패감시 활동을 해온 이재명 시장은 이를 냐다. 취임 후 자신을 만나면 귀엣말과 함께 봉투를 꺼내 주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집무실 전장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어떤 사람이 400만~500만 원 된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러하기에 CC-TV를 가리켜더러 ‘넌 범칙하더라’라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때문에 시장실을 찾아와 청탁을 하거나 돈봉투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설

CC-TV의 진화



명도 곱들였다. CC-TV가 바로 단체장과 청탁자의 비리를 예방하는 보호장치가 된 셈이다.

공 민선 5기 1주년을 맞는다. 성남시 장실처럼 전국 단체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야할 상황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사건팀 2200-573	문화홍보국 2200-541
정경부 2200-612	제육팀 2200-693	조사부 2200-57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7	전신팀 2200-685	광고매체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전신팀 2200-685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